

통일, 통합 그리고 통일교육의 방향

권만학 / 경희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1990년의 '독일통일'은 우리에게 한민족 통일도 이제는 먼 이상이 아니라 현실적 가능성이라는 가슴저린 희망을 한껏 불러 일으켰다. 하지만 '독일통일'이 희망을 주었다면 '통일독일'은 실망과 함께 많은 의문들을 던져주었다. 한반도 통일은 어떤 형식이 될 것인가? 독일식 방식은 불가피한가? 그렇다면 독일이 겪는 통일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실질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를 위해 필요하게 될 통일교육의 기본방향은 무엇인가? 이 글은 독일통일을 원용하여 이러한 통일의 방식, 통일이 제기하는 통합의 문제, 그리고 실질적 통합에 일조를 담당하게 될 통일교육의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통일의 동학과 북한 사회주의

독일통일은 한민족 통일도 가까워오고 있음을 시사한다. 독일통일은 체제경쟁에서 국가사회주의가 자본주의에 패배함으로써 결과되었다. 동독뿐만 아니라 소련, 동구 동지의 국가사회주의가 모두 붕괴했으며 중국, 베트남, 쿠바의 사회주의도 근본적 측면에서 변화했거나 변화하고 있다.

사회주의는 초기 자본주의의 비인간성에 대한 반명제로서 출발한 만큼 인간주의적 요소, 특히 평등주의를 기초로 하여 탄생했다. 문제는 마

르크스가 구조적으로 전망했던 사회주의의 역사적 세계적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 혁명을 통해 사회주의를 실현해야 했던 20세기적 현실로부터 발생했다. 혁명가들은 하나의 사회주의 혁명이 요원의 불처럼 퍼져 세계를 사회주의화할 것이라고, 그러한 역사적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20세기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의 포위' 속에서 사회주의적 요소를 유지하기 위해 그리고 권력의 논리에 따라 왜곡되었으며 끝내 붕괴함으로써 '대실험'으로 끝났다.

국가사회주의의 대(對) 자본주의 패배는 체제적 요인으로부터 연원했다. 자본주의와의 체제적 이념적 경쟁이 엄

존하는 한, 경쟁에서의 승리는 체제 생존에 필수적이었으며 승리를 결정짓는 것은 무엇보다도 생산력 발전이었다. 사회주의 혁명가들은 사회주의가 생산력 발전에 있어서도 자본주의를 능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성선설적 인간관에 기초한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당초의 인간주의를 왜곡해갔다. 반면 19세기적 자본주의는 마르크스가 예견하지 못했던 민주주의의 확산과 함께 아래로부터의 인간주의적 요구에 대응하며, 어느 정도 자기 개혁을 계속함으로써 자본주의적 갈등을 체제 내에 머무르게 하는데 성공했다.

사회주의의 체제적 요소인 평등주의, 계획경제, 자급자족 등은 그 자체의 당위적 장점과 별도로 20세기적 경제 경쟁에서 불리한 것으로 판명됐다.

평등주의는 생산성 증대를 위한 차별적 보상을 정신적 유인에 국한시킴으로써 물질적 유인으로 혁신을 유발시키고 강제하는 자본주의적 구조에 비해 비효율적이다. 계획 경제는 시장의 경쟁을 배제함

으로써, 자급자족주의는 규모의 경제를 외면함으로써 무한 경쟁으로 초국가적 세계를 포섭해 나가는 자본주의에 뒤처지는 것으로 판가름났다. 결국 국가사회주의는 체제내적 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체제적 요인으로 인해 사라지는 것이다. 이같이 20세기 국가 사회주의의 붕괴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면 북한에 존재하는 국가사회주의가 한정적일 것이라고 예측하여 무리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국가사회주의의 붕괴가 '역사의 종언'이라고 예단하는 것은 성급한 일이다. 국가사회주의가 20세기에 대한체제로서 실패했다는 사실이 자본주의의 완벽성이나 미래 사회주의의 불가능성을 보증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마르크스가 예언했던 바, 자본주의가 만개한 후 사회주의로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정적 증거는 없다.

자본주의가 지배적 체제로 지속되는 한 '자본'의 논리에 대항하는 '인간'의 논리에 의해 수정될 것이며, 이 점에서 사회주의는 여전히 비판적 대안이라는 거울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2. 분단민족의 통일과 통합

북한 사회주의의 몰락이 자동적으로 통일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한 민족이며 비슷한 체제를 가지고 있지만, 중동의 많은 아랍 국가들의 예에서 보듯이 분열된 국가로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통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체제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양측의 민중 또는 정치엘리트의 통일의지와 준비가 중요하다. 현대사에 나타났던 분단민족의 통일은 세 가지 형태를 보였다. 하나는 월맹에 의한 '월남'의 통일 같은 정복통일이며, 둘째는 독일과 재분단 이전 예멘의 경우와 같은 합의통일이다. 합의통일은 다시 전자의 경우와 같이 한쪽 체제로 통일되는 흡수통일과 양측 체제 및 권력엘리트에 평형을 기한 후자의 균형통일로 나뉜다.

정복통일은 무엇보다도 유·무형의 비용이 심대하여 바람직하지도 않고 오늘날 상황의 한반도에서 불가능하다. 합의통일은 얼핏 이상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예멘의 예에서 보듯이 융합통일이 아니라 병렬통일이 될 가능성이 있어 재분단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군사력에 대한 양측의 영향력을 균형적으로 인정할 경우, 이는 후일 재분단의 군사적 기초를 제공하게 된다. 흡수통일은 한쪽에서 '아래로부터의 혁명'이나 계속적인 체제 개혁의 결과 상대방에 수렴하는 체제나 새로운 권력엘리트가 등장하여 상대방에 투항하지 않고서는 상상하기 어렵다. 북한 사회주의의 붕괴가 역사적 필연이라면 한민족의 통일도 흡수통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은 동독에서와 같이 '아래로부터의 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크게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민족 통일이 일어나기까지는 독일보다 오랜 시간을 요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주민들은 동독주민들보다 상대 체제와 상대 지역 상황에 덜 노출된 상태이며 북한 엘리트는 동독에 비해 훨씬 자생적이며 강한 정치·사회통제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정치자유화 없는 경제자유화, 즉 중국 모델의 개혁노선으로 갈 가능

성이 매우 높는데 1990년대 들어 본격화되고 있는 개방정책은 이의 전조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중국과 달리 개방은 궁극적으로 북한 내에 '밑으로부터의 혁명'이나 남한에 수렴하는 개혁적 권력세력의 등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흡수통일의 경우, 통일방식에 있어 급속한 통일과 점진적 통일을 상정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통일에 대한 모든 결정이 서독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동독의 즉각적인 서독체제 편입이었다는 측면에서 급속통일이다. 이러한 급속통일은 통일독일에서 보는 것 같은 부작용들을 빚어낸다. 점진통일은 아직은 실례를 찾을 수 없는 상상적 통일이지만, 개념상으로는 국가적 및 군사적 통일은 급속히 이루어지 시간을 두고 지역정부의 자율성을 상당 부분 유지하면서 실질적 완전 통합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 경우 북한 지역의 발전 책임은 상당 부분 지역 자치정부에 맡기고 중앙정부는 최대한 지원을 하는 보조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반세기 가까운 민족의 분단

은 결코 지리적 분단만이 아니다. 분단의 세월은 양측에서 상이한 체제, 지배엘리트, 사회, 인간이 형성된 역사이다. 분단 이전 아무리 오랜 통일상태를 유지했던 민족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언어와 문화의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수십 년 이상의 분단은 중추적 현실과 사고방식에서 상당한 차이를 빚어낸다. 여기서 통일 이후 형식적 및 실질적 통합의 문제가 제기된다.

통일은 궁극적으로 하나의 국가형식, 즉 정치 및 경제제도, 중앙정부, 군사 및 법체계의 형성을 전제한다. 반면, 실질적 통합은 하나의 국민이라는 일체감 또는 정체성의 형성, 즉 국민형성(nation-building)을 의미한다. 일체감은 다시 둘로 나뉘는데 하나는 현실의 반영으로서 현실의 변화 없이는 변하지 않는 의식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현실에 대한 오인이나 또는 가변적인 부분으로서 교육에 의해 수정이 가능한 부분이다.

국민형성의 문제는 물리적 강제력에 의해 통합을 추진하는 정부통일보다 흡수되는 측

의 자유의식이 비교적 보장되는 흡수통일의 경우 더 심각하다. 일체감 형성에서 현실을 반영하는 의식은 많은 부분 경제적이다. 흡수된 지역의 생활수준이 크게 낮을 경우 그리고 지역간 경제격차가 급속히 개선되지 않을 경우 통일의 희망은 환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통일독일은 바로 이같은 문제에 직면하여 고통살을 앓고 있다.

3. 독일통일과 한민족통일

동독은 서독의 주도에 의해 서독 방식으로 통일할 것을 자발적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상당한 경제격차를 가진 양측의 통일은, 그리고 동독인들이 배제된 채 내려진 서독의 결정들은 적잖은 문제를 불러 일으켰다. 통일 후 동독경제는 예상보다 큰 위기를 맞았다. 국가의 보호막 뒤에서 온존해 온 동독기업들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우며 성장해 온 서독기업들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동독기업들이 그나마 경쟁력을 유지했었던

코메콘(COMECON) 시장도 사라져버렸다. '보상보다 원상회복'의 원칙 위에서 이루어진 몰수재산 처리는 경제회생을 가져올 신규투자를 지연시켰다. 결과는 대량의 기업도산과 실업이었다. 남은 기업들은 서독인들에 의해 매수되었으며 관리직이 서독인으로 채워졌다. 예상보다 부진한 경제상황은 동독지역 주정부들의 재정을 압박했다.

서독 주도에 의한 서독식 체제로의 통일은 서독에 의해 대부분의 통일비용을 부담케 했다. 그러나 통일비용은 당초 추정을 훨씬 웃돌았다. 이를 충당하기 위해 예상치 못했던 증세를 감내해야 하고, 저임도 주저않고 수용하는 동독인들에게 일자리를 내주어야 한 서독인들의 불만은 커져갔다. 10년 내에 동독 주민의 생활수준을 서독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청사진이 제시됐지만, 당장 닥쳐온 실업과 경제격차는 일부 동독인들에게 좌절스런 것이었다. 결과는 구 공산당 후신인 민사당(PDS)의 부상과 극우단체의 등장 및 테러이다. 통일과정에서 주요 정책들을 결정한(서독)정부에게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는 경향이 증대되었다.

지난해 말 총선에서 PDS에 대한 지지는 4년 전에 비해 50% 상승한 동독 유권자의 20%였다. 여론조사들에 따르면 적지 않은 동독인들이 '민주주의'와 자신의 경제상황, 서독의 사회보장 체제 등에 실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다 실망한 층이 PDS 지지자들이었다. 더구나 동독 지역의 정부, 기업 등 거의 모든 부문에서 상층부는 서독인들이 차지하고 동독인들은 하층부로 밀려남으로써 또한 그러한 현상을 초래한 것이 전적으로 서독정부의 정책 때문인 것으로 인식함으로써 동독인들은 '동독은 통일된 것이 아니라 식민지화'되었으며 자신들은 '2등 국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독일은 결국 가진 자 3분의 2와 가지지 못한 자 3분의 1로 구성된 '3분의 2 사회'가 되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통일 자체는 여전히 지지하고 있어 보다 '준비된 통일'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독일이 당면했던 문제점들을 한국 역시 직면하게 될 것이다. 통일의 문제점은 무엇

보다도 반세기가 벌여놓은 경제적 격차이다. 통일 직전의 경제격차는 통일 후 투입되어야 할 통일비용과 비례한다. 한민족은 통일이 되었을 경우 부조해야 할 인구와 부조받아야 할 인구비에 있어, 좁혀야 할 격차에 있어, 그리고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할 경제의 안정성과 성장성 등에 있어 독일보다 불리하며 남한은 보다 벅찬 부담을 안게 될 것이다.

독일과 같은 '3분의 2 사회' 현상을 교정하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그간 주민들의 반발이 어느 정도인가가 중요하다. 독일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기존 정치체제를 뒤흔들 정도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동독 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나타냄으로써 정치안정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독일보다 통일의 부담이 더욱 벅찰 한국의 경우, 만일 통일 후 광범위한 북한주민들의 좌절이 공격성으로 연결된다면 그리하여 맹아단계의 민주주의마저 위협받는다면 실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결국 통일을 '만들 수 있다'면 통일 이전에 이러한 격차

를 축소시키는 것이 중요하게 된다. 그러나 통일이 어느날 갑자기 '오는 것이라면' 통일 후 북한주민들이 최대한 자율적으로 자구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남한의 경제수준을 따라잡는 책임을 내재화하지 않고서는 그들이 겪게 될 집단적 환멸로 인해 어떠한 불안정이 야기될는지 모른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통일 후 북한 지역에 자치적 지방 정부를 수립하여 그들 스스로가 경제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중앙정부 및 남한 지역정부는 그들을 도와주는 보조적 역할을 맡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이 옳다면 우리는 바람직하면서도 현실성 있는 남·북한의 통일방식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흡수통일이 역사적 운명이라면 급속통일보다는 점진통일이 선택할 만한 통일이 될 것이다. 즉, 체제적, 중앙정부적 차원에서는 남한이 흡수통일하되 지역 차원의 경우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이는 실질적으로 일반적 의미의 '연방제 통일'이 되며 현재 남한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방자치

의 확대와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독일에서는 '통일방안들'이 거의 없었다. 냉전시대 통일이 계획대로 오지도 않았겠지만, 이념적 대결이 첨예한 상태에서 통일은 궁극적 체제를 언급하게 됨으로써 냉전상태를 더욱 격화시킬 가능성이 농후했다. 따라서 남·북한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제안한 통일방안은 통일염원의 표현이었다기보다는 다른 형태로 수행된 냉전의 연장이었다.

현재 남한의 통일방안은 궁극적으로 1정부를 천명함으로써 북한 권력엘리트의 입지를 배제한 것을 북한 정권이 한사코 거부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북한이 제안한 고려민주연방제의 내용은 수정되어야겠지만, 연방제라는 방향만은 진지하게 검토할 만하다.

더 이상 명명정치(politics of naming)에 의해 일반적 의미의 연방제마저 거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또한 북한 엘리트의 역할을 인정한다 해도 실제 통일시점이 되면 북한정권은 새로운 엘리트로 충원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4. 통일교육의 방향

분단은 한 민족 두 지역에 이념적 분단만이 아닌 매우 상이한 사회와 역사를 형성했다. 따라서 분단 뒤에 찾아오는 통일은 단순한 지리적·제도적·기계적 통일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회'의 통합, 즉 역사의 통합이다. 남·북한 주민들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언어와 문화 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보다 중요한 사상과 문화의 차이는 정치경제체제와 관련된 부분들에서 발견될 것이다. 북한 주민들은 전체주의적 정치, 사회주의적 경제, 북한정권 등에 대한 생각에서 남한인들과 가장 차이를 보일 것이다. 따라서 현실의 변경뿐만 아니라 실질적 통합을 위해서는 인식의 전환을 돕는 통일교육이 필요하다.

통일교육은 정치교육, 재사회화(resocialization) 교육, 그리고 전문직업교육의 셋으로 구성될 것이다. 아래에서 보게 되듯이 통일교육은 통일 이전부터 필요하며, 북한 주민뿐만 아니라 남한 주민에게

도 필요하다. 통일교육은 또한 정규교육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통일은 한민족 전체의 신사고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전문직업교육은 통일이 가져올 대규모 산업구조 조정에 대비하고, 지배적 경제를 이루게 될 남한식 직업에 대한 적응도를 높여주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이는 대체로 현재의 전문직업교육을 확대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체제와 역사에 대한 인식전환을 필요로 하는 정치교육과 새로운 체제에 적응하기 위한 재사회화 교육이다. 흡수통일이 역사적 필연이라면 북한주민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로 동화되어야 할 것이며, 남한 역시 북한주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현존하는 남한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결점들을 보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북한주민들은 자신들의 체제와 정권에 관한 생각과 행태를 요람에서 무덤까지 실시되는 사상교육을 통해 익혀왔다. 북한은 다른 어느 공산주의보다도 사상혁명과 사상교

육을 중시했으며, 특히 김일성의 유일사상 교화를 강조해왔다. 현 사회주의 헌법에 따르면 북한의 교육목표는 “사회와 인민을 위해 투쟁하는 혁명가”,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인간”을 양성하는 것이다. 실제교육에서는 위의 목표의 외연으로서 자본주의와 남한 정권에 대한 적개심, 그리고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이 주조를 이룬다. 김일성이 1977년 발표한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는 사회주의 교육을 “사람을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사회적 존재로 키우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사회주의 교육의 결과 양성된 북한주민들은 집단주의, 획일주의, 수동성과 복종이라는 행태적 특징을 이룬다.

북한주민들의 의식형성이 현실에 의한 확인보다는 교육을 통해 이루어짐으로써 현실과 의식의 괴리가 생겨날 가능성이 높다. 북한교육 내용 중 과연 어느 부분이 얼마만큼 수용되며 또한 삶의 연륜을 더해 감에 따라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리고 통일이 되었을 때 무엇이 문제로 남을 것인가? 이에 대한

경험적 자료는 별로 없지만, 일반 교육이론과 독일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은 추론이 가능하다.

의사표현이 자유롭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받은 내용과 다른 생각 및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짐작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연령층으로 보아 정규교육과정에 있는 미성년층에 대한 교육 효과가 가장 클 것이며, 일단 사회에 진출한 성인층의 경우 자신들의 사회적 위치에 비추어 의식이 재조정될 것이다.

또한 북한주민의 28%에 달하는 핵심계층 등 수혜층은 대체로 친체제적이겠지만 27%를 차지하는 적대계층은 반체제적일 것이며 나머지 동요계층은 시대상황에 따라 문자 그대로 동요가 예상된다. 현실 정치경제 상황이 만족스러울수록 교육 효과는 지속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의식과 현실의 부조화는 커질 것이다.

통일이 찾아올 즈음이면 북한주민들의 상당 부분은 체제에 관한 그들의 중추적 가치가 이미 변해 있을 것이며 또한 통일 후에 직접 목도하게

될 남한 현실은 변화를 가속시킬 것이다. 하지만 독일의 경우에서 보듯이 보다 중요한 것은 상이한 체제가 결과한 경제격차에 대한 원인적 인식이다.

역사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지는가 아니면 구조에 의해 규정되는가의 논쟁을 여기서 재현할 필요는 없지만, 통일교육에서 등장하는 역사인식은 이들의 균형을 요구할 것이다. 남한이 잘 살고 북한이 못 사는 것은 단순히 남한 주민들이 보다 현명하고 근면하며 북한 주민들이 우매하고 게을러서 그러한 것은 아니다. 경제격차는 상이한 체제에서 연원하는데, 체제 역시 단순한 선택의 문제만은 아니었다. 역사의 특정 시점에서 국내·외적으로 서로 다른 영향이 작동한 결과, 많은 남·북 주민들의 경우 자신들의 체제를 선택했다기보다 떠맡게 된 것이다. 특히 반세기가 지난 오늘날의 분단 이후 세대들은 자신의 선택과 관계없이 특정 지역에 태어나 특정한 체제 논리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었다.

그렇다고 남한주민들이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 수동적으

로 머물렀던 것만은 아니다. 자본주의 자체가 부단한 노력을 요하는 만큼 남한주민들은 부지런히 유효노동을 해야 했으며 그 결과가 오늘날의 발전인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남·북한 주민 양측에게 통일에 필요한 의식을 배양해준다. 북한주민들에게 남한의 풍요가 노력의 결과임을 인식시켜줄 것이다. 통일이 되면 당장 남한과 같이 '유토피아'에서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북한주민들에게는 과도한 기대상승의 혁명을 막아줌으로써 몸소 느껴야 하는 경제격차에 대한 인내를 키워줄 것이다. 북한의 상대적 낙후는 통일 때문이 아니라 과거 국가사회주의의 유산이며 통일 후 북한의 비교상대는 남한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통일 이전 북한이며, 공간적으로 동구 등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본주의 동쪽조차 가지지 못한 옛사회주의 국가들이라는 현실인식은 새로운 역사인식의 외연이 될 것이다.

남한주민들에게는 북한의 낙후가 개인적 선택이라기보다는 구조적인 문제로서 남한이 북한을 도와야 하는 것이

단순히 경제적 시혜가 아니라 역사적 민족적 책무임을 인식시켜 줄 것이다. 통일비용의 부담은 단순한 경제문제가 아니라 역사문제이며 체제문제인 것이다. 나아가 통일은 통일 직후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한민족 전체에 더 큰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통일비용의 현실적 정당화가 필요할 것이다.

경제격차에 대한 구조적 인식은 통일 후 발생할 또 다른 남·북간 사회갈등을 완화시켜줄 것이다. 같은 조건에서 가진 자는 가지지 못한 자에 대한 경멸감을 발생시키기 쉽다. 비록 다른 조건에서 생활해 왔지만, 남한인들은 북한인들에 대해 결과적으로 이러한 경멸감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독일의 경우 서독인들은 동독인들을 ‘독일어를 이야기하는 외국인’ 또는 ‘또 하나의 독일’로 간주하며 동독인의 80%가 ‘독일인’으로 생각하는 반면 서독인의 80%는 자신들을 여전히 ‘서독인’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심리적 갈등의 완화를 위해서도 동독인들의 오늘이 개인적 결함보다는 체제적으로 규정되었다는 인식의 형성이 중요

하다.

콜 독일총리가 통일 4주년을 맞아 “서독의 풍요가 단 4년만에 달성되지 않았음을 동독인들이 납득할 때, 그리고 동독인들이 40년간을 기다릴 수 없다는 점을 서독인들이 이해할 때 인간적인 통일이 달성될 수 있다.”고 한 것은 그대로 한민족에게도 적용될 것이며 이러한 인식을 형성하기 위한 정치교육의 중요성도 그만큼 크다.

다음으로 북한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통일 후 정치경제 체제인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적응하기 위한 재사회화 교육이다. 그들은 생활의 많은 부분을 국가에 의존해 왔으며 정치적 수동성에 길들여져 있다. 최근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동독인들의 3분의 2는 일자리 창출이 국가의 임무라고 생각함으로써 서독인의 40%보다 훨씬 높은 국가 의존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제 그들은 개인이 보다 많이 자신의 경제상황에 책임을 져야 하며 자본주의는 개인의 성실한 노력에 보다 많은 보상을 한다는 사실과 함께 자본주의적 노동윤리를 내재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치적

으로도 마찬가지이다. 북한인들은 이제 수동성에서 벗어나 능동적 정치행동이 국가의 정책을 결정한다는 참여적 정치문화, 참여적 정치의식을 배양해야 할 것이다.

통일교육의 대상은 통일 후 북한인들만이 아니다. 통일교육은 통일 이전에 남한인의 의식전환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통일비용 분담 의지와 상대적으로 남한 체제에 부적자(不適者)인 북한 주민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가짐의 배양뿐만 아니라 체제적 과거에 대한 관용과 대안적 체제에서 배우는 자세도 중요하다.

남한의 대 북한 교육이 비록 과거의 적개심 고취 일변도에서 통일안보교육으로 전환되고 있기는 하지만, 남한인들의 대부분은 대북 적개심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나아가 독일의 경우와 달리 6·25라는 동족상잔을 경험한 한국의 경우 통일과 함께 국가의 통제를 벗어난 보복이 자행될는지 모른다. 많은 남한인들이 6·25의 책임을 북한 공산당 개개인들의 ‘침략야욕’에 돌리는 데 익숙해 있다. 또한 북한의 정치 통제 및 억압의 희생자들이 지배층에 대

한 보복을 기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의 통제가 동독에 비해 보다 가혹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보복의 규모도 클 가능성이 높다. 몇몇 대표적 인물들에 대한 기소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기소는 상징적 수준에서 그치고 관용과 화해를 도모하는 것이 새 시대에 걸맞을지도 모른다. 만일 그러한 사고가 필요하다면 그러한 관용을 배양하고 나아가 북한의 '정치적 범죄행위'를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체제적인 행위로 인식하는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북한 체제와 사회 모두가 타기할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원초적 자본주의에서는 자신의 운명에 대해 자신이 책임을 진다. 하지만 발전된 자본주의에서는 사회복지 및 사회보장 등의 형태로 국가가 사회 구성원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사회주의는 적어도 일부 이런 측면에서 자본주의를 능가했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동독인들의 60%가 자신의 현재 사회보장 상황에 불만을 표시하고, 4분의 3이 동독 사회복지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으며, 60%

가 구동독의 사회보장체제를 지지했는데 이는 국가사회주의가 어느 정도의 정당성을 획득하는 기초로 작용했던 것들이다.

또한 평균적 북한인은 남한도 과거 자랑했던 공동체적 우애, 예의, 이타심 등의 전통적 미덕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다. 본격적인 자본주의 발전과 함께 많은 남한인들은 다른 선진자본주의 국민들처럼 이러한 덕목들을 상당 부분 상실해가고 있다. '한국적 미덕'의 재발견은 한국사회를 보다 인간적으로 만드는 데 좋은 자극이 될 것이다.

남한인들이 북한에서 배울 것이 있다고 주장함은 남한의 현존 정치체제와 자본주의를 한층 발전시켜야 통일 이후가 보다 덜 갈등적일 것임을 암시한다. 남한 내부에 존재하는 비민주적 요소들, 심각한 소득 및 재산 격차, 지역 격차, 투기와 정경유착 등 불의한 방법으로 획득하여 처벌이나 정당한 세금 납부 없이 축적한 부의 존재 등은 남한주민 내에서도 갈등을 자아내고 있으며, 통일이 되었을 경우 북한인들을 더욱 실망시킬 것이다. 통일 이전에 북한인들

이 보다 자발적 동의를 줄 수 있는 한층 발전된 민주주의와 개혁된 자본주의를 이룩해야 할 것이다.

5. 결 론

독일통일은 20세기 국가사회주의의 일반적 붕괴와 함께 동독 사회주의가 몰락함으로써 찾아왔다. 사회주의의 붕괴는 체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초래되었으며 북한 사회주의도 이러한 20세기 사회주의의 보편적 전철을 밟을 것이다. 한민족의 통일 형태도 결국은 독일과 비슷한 흡수통일이 될 것이다.

하지만 독일은 실질적 통합 문제에 있어 몸살을 앓고 있다. 통일이 국민형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독일은 통합의 문제가 기존 체제 내에서 해소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좌절에도 불구하고 동독인들의 80%는 통일이 옳았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한반도의 객관적 상황은 독일보다 불리하다. 통일비용은 보다 감당하기 어렵다. 따라서 통일방식으로는 독일과 같은 급속한

흡수통일보다는 점진적 통일이 한민족에게 보다 바람직하며 현실적인 것이 된다. 그것은 국가적 통일은 급속히 이루어져 경제회생을 위한 자구노력은 북한 지역정부의 주도에 맡기는, 일반적 의미의 '연방제 통일'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통일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남한은 통일에 앞서 보다 높은 수준으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발전시켜야 하며 실질적 통합을 위해 통일교육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통일교육은 정치교육, 재사회화교육, 그리고 전문직업교육으로

나뉜다. 정치교육에서는 체제에 대한 구조적 이해가 중추를 이루어야 한다. 이를 통해 남·북한 주민들은 통일이 가고 있는 부정적 측면에 대해 관용과 인내를 배우게 될 것이다. 또한 재사회화교육은 북한인들이 새로운 체제에 적응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전문직업교육은 통일과 함께 찾아올 산업구조 조정과 남한식 직업에 대한 적응에 대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통일은 대역사이며 대전환이다. 분단보다 나은 통일을 맞이하고 만들어가기 위해 보

다 구체적이고 적실한 정책과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나가는 일을 늦출 수는 없다. ■

권만학/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텍사스 (오스틴) 대학에서 정치학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텍사스 A & M 대학 객원교수,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등을 지내고, 현재는 경희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저서로 『신세계질서와 남북한 관계』가 있고, "Political Economy of Capitalist Transition and the South Korean Case", "김일성사후 대북한정책의 기본방향과 과제" 외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